

성명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산 배추의 국내 반입 여부를 즉각 공개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배추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의 배추 산지에서 일부 수매업자들이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목적으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의 상품성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수매 현장에서 이러한 물질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이는 단순히 중국 내 특정 지역의 일탈 행위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국내 배추 가격 안정을 이유로 중국산 신선 쌈배추 수입을 크게 확대해 왔으며, 중국산 김치 또한 매년 대규모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에서 생산·유통된 배추가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는지 여부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미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다면 수입업체, 수입 시기와 물량, 국내 유통 경로 및 안전성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배추와 김치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일시적인 검사 강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중국산 신선배추는 물론 중국산 김치 등 배추를 원료로 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생산·가공·통관·유통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위해 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상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수입 배추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도 즉각 개선해야 한다.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지만, 중국산 생배추(쌈배추) 자체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원산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최근 외식업체와 식자재 유통시장 등을 통한 수입 신선배추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생배추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신선·냉장 배추의 수입통계 역시 통배추, 알배기배추, 쌈배추 등 실제 유통되는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수입량과 유통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폭염·집중호우·병해충 등 생산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배추 수급 안정의 기본은 수입 확대가 아니라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가격 상승기에 수입부터 검토하는 단기적인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계약재배 확대, 생산비 지원, 비축물량 확보,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농업인·산지유통인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중국산 ‘포름알데히드 배추’의 국내 반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입·검사 및 국내 유통 여부와 그 결과를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하나. 중국산 신선배추와 김치 등 배추 관련 수입 농산물·식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등 위해물질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생산지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추적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음식점과 외식·급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수입산 생배추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

하나. 통배추·알배기배추·쌈배추 등 실제 유통 형태별로 수입실적과 유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 농산물 품목분류(H.S Code) 및 통계관리 체계를 세분화하라.

하나. 국내 배추가격 상승 때마다 수입농산물로 대응하는 단기적인 가격안정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내산 배추를 우선 활용하는 수급안정 원칙을 확립하라.

하나. 계약재배 확대와 생산비·병해충 방제 지원, 비축 및 출하조절 기능 강화 등 국내 배추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인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어떠한 경제적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지키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농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수입 중심의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점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체계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